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일환



미국 테크노 스타일의 원조 톰 크랜시의 소설 중에 '섬 오브 올 피어스(The Sum Of All Fears·공포의 총합)'가 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국내에서 상영돼 흥행에 성공했다. 그 내용인즉, 이스라엘에서 출신 원폭을 테러분자가 미국 불티모어에 터트리고 이 사실을 알지못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믿지못해 핵전쟁의 일촉즉발 상황까지 간다는 이야기다. 이 소설의 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계속 쌓이면 결국에는 과격으로 치닫한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깔려 있다.

생하고 주변에 환자가 급격히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느끼는 공포의 총합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당장 주변에서 기침만 하는 사람만 봐도 신종플루를 의심, 피해가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 학교에서는 기침만 해도 왕따를 당

산되는 데는 보건당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이 깔려있다. 우선은 국민이 신종플루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의 빈약함은 막연한 불안을 키우는 촉매제가 된다. 당장 국민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 예방의학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예방의학 전문가들은 해마다 찾아오는 겨울철 독감보다 사망률이 낮다고 하는데 이미 국민감정은 공포 그 이상이다. 또 신종플루의 확산에 대한 즉각 대응이 아닌 되고 있다. 물론 보건당국은 병의 발병부터 확산까지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에

다. 일선교육청에 대책을 따져겨 모순된 지침들이 남발되고 있다. 정작 학교는 휴교하면서 학원에 대한 대책은 없고 휴교 또는 휴업 기준도 제각각이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범정부차원 행동 나서야

지난달 정부는 담화를 통해 '신종플루로 부터 국민의 생명을 꼭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범정부차원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나 교육청에 맡겨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국민행동통신이 중요하다. 당장이라도 전체 학교가 휴교를 해서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행동에 옮기는 것이 맞다. 각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내놓는 지침으로는 병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번이 가동되는 중앙대책본부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신종플루 대안이 예상되는 겨울을 대비 국민행동통신과 관리 시나리오를 이른 시간 내에 밝히고 대대적인 국민교육에 나서야 한다. 시간이 없다. 백신접종도 순차적이 아닌 집단접종으로 전환해야 한다. 막연한 공포가 커져야 할지 모르나, 공포의 총합이 인계점을 넘어 공황으로 치달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의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연재부처장>kh8@kwangju.co.kr

신종플루-공포의 총합(總合)

막연한 불안이 공포로

최근 신종플루의 급속한 확산과정을 보면서 문득 이 소설을 떠올렸다. 인간의 나약함이 궁극의 공포 앞에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서 신종플루도 이대로 공포가 확산되면 자칫 걷잡을 수 없는 공황상태로 치달아가거나 아니지 하는 우려가 든다. 지난 4월 처음 발견됐을 때만해도 그저 다른 나라의 일인 양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6개월이 채 안돼 신종플루는 공포로 변했다. 날씨가 추워져 사망자가 계속 발

하고 열이 높다고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한다. 또 격리 수용된 학생들은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다. 자려는 증세를 숨기고 등교하려 하고 부모들은 황당하게 쫓겨 오는 자녀를 서둘러 병원에 데려가지만 병원 진료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직장에서도 감염자 부모들은 출근하지 못하고 대인기피증까지 번지고 있으니 소문만 나도 회사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요즘 보건당국의 행태를 보면 답답하다. 신종플루의 확산에 대해 같이(之)자 행보를 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공포가 확

는 국가전염병 재난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Red)으로 상향하는 등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하지만 선제적 조치가 아닌 사후 대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신종플루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에 확산될 것이라는 예고는 이미 돼 있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발생 초기에도 허둥지둥하다니 재난단계에서 발동되는 범정부차원의 대책은 며칠이 지난 지금도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특히 신종플루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보건당국의 대처는 한심한 수준이

시 설

北 또 서해 도발, 단호하되 냉철한 대응을

10일 북한이 서해에서 또 무력도발을 자행해 교전이 발생했다. 남북이 서해에서 교전한 것은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에 이어 세 번째로, 7년 여만이다. 북한 경비정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들어와 선제사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가 때인 만큼 충격은 더 크다. 북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이 수차례 경고를 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남하, 경고사격을 가하자 북측 경비정이 50여 발의 직접 사격을 가했고 우리 측 고속정이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사격을 가해 북측 경비정을 퇴각시켰다. 다행히 우리 해군이 신속히 대응해 피해는 없었지만 북측 함정은 연기가 날 정도로 반파되어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전 당시 해상에 9척의 우리 측 민간 어선이 있었다고 하니 자칫 큰 화를 부를 뻔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군사충동의 발미

가 될 만한 어떤 여건이나 조짐도 없었던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져 경악스럽다. 북미 양자대화와 오바마 미 대통령령의 방향을 앞둔 시점에서서 북측의 의도를 더욱 짐작하기 어렵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의도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북측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도발로는 얻을 것은 전혀 없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감조되고 싶다. 남북관계는 작은 분쟁이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시·군 통합 무산' 지역갈등 해소 시급하다

광양만권과 무안반도 등 전남지역 2곳에 대한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됐다. 이들 지역은 주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일부 시·군의 반대율이 높아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행정구역통합 시도는 출발부터 극심한 지역갈등을 야기시켰다.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반대하는 지자체들의 불참으로 반쪽 공청회로 전락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통합 반대단체를 지원하거나 찬성 서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통합 무산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응 역시 크게 엇갈리고 있다. 시·군 통합은 행정·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 기대되고 2014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 행정 개편을 위한 출발점이다. 행정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당 주민들의 의사다. 정부가 통합을 전제로 지역주

민들의 의견을 몰아붙였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교부금 확대 같은 당근을 제시했으나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통합 시기 역시 서두른 감이 있다. 연말까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했다. 이제 주민 갈등을 접고 지역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 광양만권과 무안반도는 전남의 발전을 주도하는 양대 축이다. 2012 여수세계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광양만권 주민들이 합심해야 한다. 무안반도 역시 무안공항 활성화 등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전면적인 행정 구역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행정 구역 개편은 나라의 골격을 바꾸는 중대사인 만큼 졸속 추진은 금물이다. 이번 통합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충분한 시간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이상욱



노란 은행잎이 스산한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버스 정류장에서, 옛 기억 속에 이따금 떠오르던 고등학교 때 여자 친구를 뜻밖에 만나게 되었다.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 같더니 다가와서 "혹시 OO씨?" 하는데 너무나도 오랜만에 한 순간 얼떨떨했다. 옛날 내 여동생 편에 '빨강 머리 앤'이란 소설책을 보내주기도 했던, 또 그때 한창 유행하던 트윅트츠 춤도 제법 잘 추던 단발머리 소녀였었다. 그랬던 그녀가 세월이 걸맞게 얼굴이 조금은 변하고, 화장으로 감춘 눈가의 잔주름도 살짝 보이는 오십대 부인이 되어 있었다. 하연 반가웠다. "아!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이나." "아! 맞구나. 역시 너였구나." 정류장 옆 등나무 덩굴 아래 의자에 앉아 백양사 단풍구경 갔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나간 세월을 들추기 시작했다. 한참 뒤 그녀가 미소를 머금고 손을 흔들며 버스를 타고 떠나갔다. 생기발랄한 여학생에서 두 아이의 할머니로 변해버린 그녀를 만나서인지 몰라도, 무엇보다 잃어버린 듯한 허전한 이 가을밤 옛 추억을 더듬게 되다 보니 어느새 해군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겨울에 들어간 통산학교가 제일 눈에 선하다. 신병훈련소 동기생 열 명과 친형제같이 서로 의지하며 반년 남짓 보냈기 때문이다. 신참 때는 별 이유 없이 하고많은 날 기합 받고 고참 때는 권히으

어느 가을밤의 회상

스대며 동향 사람은 특별히 배려해 주기도 했다. 한번은 교약한 교관 만나 싸울만한 사색 바닷가 모래밭에서 펜티던 입고 속칭 '원산폭격'이란 기합을 받은 일도 있었다. 내무대에서 학교 갈 때는 항상 구보 합창을 했는데 소리가 크거나 작거나 인술하는 고참이 바락바락 악을 썼다. 경기도 놈, "올라라 이놈들아." 경상도 놈, "얼굴이 이럴퍼." 전라도 놈, "소리가 고것밖에 안나오제." 대일 끝에서 고참들이 히히대는 소리가 합창하는 군가보다 더 컸다. 그럴 때마다 신참 때는 속으로 울분을 삼켰었다. 그러나 우리도 고참이 되니까 마찬가지였다. 선작순 비상훈련 때 바지를 거꾸로 입고 나온 놈도 있었다. 출동 중 회사부서의 착오로 부식이 바다났을 때가 있었는데 어선에서 구입한 오징어를 삶아 사들 동안 신들이 나도록 장정에 찍어 먹기도 했다. 특히 망망대해에서 한 달 만에 돌아와 부두 매점 아가씨를 보고 "와! 여자다." 하며 합성을 질렀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기막힌 추억이다. 또 전출된다고 울고불고하던 단골 막걸리 집 씨, "외상값 꼭 부지겨레이." 하며 삶은 계란을 정성껏 싸주던 경상도 주모, 다 잊지 못할 사람들이다. 학교 수료 후 합정으로 기지로 제각기 헤어질 때 우리는 꼭 연락하자며 약속도 힘차게 여러 번 했다. 그러나 그 후 몇 년간은 소식들이 있었지만 점점 멀어져 갔다. 벌써 삼십여 년이 지났으니 많이들 변했을 것이다. 세상 떠난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귀뚜라미가 서글프게 울고 낙엽이 하얗게 흩날리는 가을밤이면, 별의별 옛날 일이 다 떠올라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비단 나 뵈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세월은 정말 덧없이 흘러가는가 보다.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유리창을 흔들며 가을밤은 깊어만 간다. <수필가>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최종만



지금 광주 돛구장을 건설하는 일로 예상 이상의 논란이 일고 있다. 오랜 숙원을 해결하게 되었다고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우려와 오해 차이를 넘어 근거 없는 비방이 버섯이 매스컴을 타고 있다. 물론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득실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민자 유치에 공들인 사람들의 열정이 그만 식어 버릴까 염려스럽기까지 하다. 앞으로의 생산적인 논의를 위한다면 최소한 몇 가지 유념해 주었으면 한다. 먼저 대상 시책이 추진된 동기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조건 등을 정확히 파악해 주었으면 한다. 이번 돛구장 사업의 경우 이를 민자로 추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재정절감에 있다. 총사업비가 얼마이건 간에 시 예산을 가장 적게 투입하는 방안이 '민자에 의한 돛구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개방형구장은 비록 추정 건설비가 1천억 원 정도이지만 시비로 건설하고 운영비까지 부

돛구장 논의의 전제

담하게 되므로 시민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 민자 돛구장은 건설비가 4천억 원 정도이지만 민간회사가 전액 부담해 짓고 운영까지 책임지므로 시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돛구장이 개방형구장보다 4배나 더 드는데 시비를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겠느냐는 식의 비난은 초점을 벗어 나 있다. 개방형구장과 돛구장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돛구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는 말이다. 시 재정 현황상 1천억에 가까운 돈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매년 운영비마저 부담해야 하는 쪽은 현재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시비는 안 들어가도 민자 투입에 따른 반대급부로 특혜를 주게 되고 이용하는 구단이나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마련이라는 지적은 경청할만하다. 다만 인센티브 제공 없이 이익만 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고 문제는 그 인센티브가 시민이 수용할 정도인가에 달려 있으므로, 예산함으로써 모처럼 맞은 기회를 부정적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신빙성 있는 자료 인용, 합리적인 비교를 주문하고 싶다. 예를 들면, 먼저 일본의 돛구장 6곳 중 혹자를 내고 있는 구장이 도쿄돛구장 뿐이라는 주장이다.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내용이 방송을 타고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는지 궁금하다. 시에서 직접 일본 구단 등에 전화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응답해준 5곳이 모두 혹자다. 도쿄돛구장은 현재 85% 가동률, 즉 연간 308일을 사용하고 있다. 동경대학 가와구치(川口健一) 교수와 안산시 돛구장 세미나(200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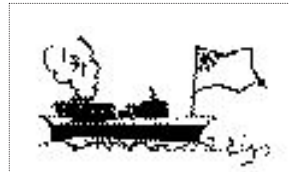
3)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혹자는 물론이고 개관한 후 7년 만에 투자비 전액(600억 엔, 약 7천500억 원 상당)까지 회수한 것으로 나와 있다. 사토로도도 2001년 개장하고 바로 1년 후부터 현재까지 8년 연속 혹자를 내고 있다. 또 히로시마시가 돛구장 건립에 대해 수년 동안 백 여회를 연설회의 등을 통해 논의하다 결국 개방형구장을 짓게 되었다고 하면서 민주적인 공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히로시마의 경우는 구단도 시민구단이고, 구장 건립과 운영에 시비가 투입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안는 부담이 과도한 것인가의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시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민간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유형이므로 히로시마와는 사정이 다르다. 일본의 돛구장 입장료가 우리의 5배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물가, 임금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환율을 곱한 채로 비교하

無 等 鼓

조선시장에서 중국의 전설이 놀랍다. 국제 조선·해운시장 분석기관인 영국의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중국의 수주 잔량은 10년 이상을 지켜온 한국을 넘어 1위에 올라섰다. 기술력보다는 노동집약적인 저가 생산 속을 야금야금 공략하는 전술을 구사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수주 잔량의 세계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양국 간의 차이가 0.9%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안방이나 다름없는 조선시장을 중국에 내준 사실은 충격 그 자체다. 업체별 수주 잔량 순위에서 국내 기업들이 1~6위를 차지하고 있다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선종수주에 주력했다는 것도 더 이상 위안거리가 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호황'만 믿고 잠시 주춤거리던 동안 중국기업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차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한국 타도'를 시도해왔다. 풍부한 노동력을 동원해 저가 선박시장을 싸늘이해온데다, 엄청난 외환보유액을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국가 수주 잔량에서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고만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한때 중소형 조선산업의 미래로 불렸던 전남지역 조선사들이 직격탄을 날려 버는 것도 더 이상 위안거리가 될 수는 없다. 고질적인 자금난과 원자재난에다 중국의 거센 압박까지 겹치면서, 대다수의 서남권 조선사들은 현재 고사 일보직전에 처한 상태다. 뒤늦게 정부가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도 하는데, '사후 약방문'이 아니길 바란다. /이종대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조선업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濤濟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7-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부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1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건부 2200-691	
사회2부 2200-62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